

발 간 등 록 번 호

12-B552783-000057-01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Contents

I. 일러두기	04
1. 가이드라인의 목적	04
2. 가이드라인의 활용방향	05
II. 정부용역계약과 지식재산권	06
1. 정부용역계약	06
2. 지식재산권	07
III. 지식재산권 관련 부당한 사례 유형	10
IV. 정부용역계약 관련 지식재산권 규정 해설	14
1. 용역계약일반조건	15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9
3.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0
4.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시 저작권 관련 규정	33
V. 정부용역계약 시 유의사항	34
1. 단계별 고려사항	34
2. 계약의 일반원칙	36
3. 계약 시 주로 문제되는 권리분야 및 범위	37
4. 계약 시 고려하여야 할 저작권법상의 원칙	40
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49
6. 입찰 공고 및 계약서 표준 문안	53
참고 : 저작권 등록제도	56



I. 일러두기

1. 가이드라인의 목적

- ▶ 상당수의 정부 사업은 민간 기업이나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용역계약 체결과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갈등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정부용역 발주기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용역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이용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가이드라인의 활용방향

- ▶ 정부용역계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법규는 여러 법령과 규정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정보와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 모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주의)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 당사자 등의 참고용이므로 법규의 최종 해석(유권해석,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주기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사업 기획, 용역 공고 및 계약 체결과 같은 용역 진행 과정에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고려사항, 체크리스트, 표준계약문안 등을 적극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용역수행자(법인 또는 개인 등)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수행 이후까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범 해설, 표준계약문안, Q&A 등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정부용역계약과 지식재산권

1. 정부용역계약

가. 정부용역계약의 성격은?

⇨ 사법상 계약

- 공공재의 생산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물품 혹은 서비스 등의 제공과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입니다.

⇨ 정부용역의 종류 :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정보통신공사법 등에 의한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평가, 안전점검, 측량 등 기술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 일반용역은 기술용역 이외의 모든 용역을 포괄하는데, 정책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 정보화사업 용역(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타 일반용역(전시·행사대행, 광고·디자인, 교육 등) 등이 포함됩니다.

나. 정부용역계약의 당사자는?

- ⇨ 정부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발주기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계약상대방(민간 사업자)입니다.
- ⇨ 정부용역계약은 일반인 사이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다. 정부용역계약의 방식은?

- ⇨ 수의계약을 제외하면 통상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지식재산권

- ⇨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적인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하며, ①저작권, ②산업재산권, ③신식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 저작권

- ⇨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¹⁾)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 저작인격권(거래 불가능)

- 종류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보호기간 : 저작자의 생존기간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권(거래 가능)

- **종류**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보호기간** :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까지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생존과 관계없이 공표된 때부터 70년 간 보호

* 업무상저작물 : 법인·단체 등의 사용자가 기획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적으로 작성한 저작물

저작물의 예시

- 어문저작물 : 소설, 시, 수필, 평론, 논문, 학습물, 강연, 연설, 시나리오, 대본, 기획안 등
- 음악저작물 :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조소, 판화, 공예, 디자인, 삽화, 캐릭터, 각종 도안 등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 사진저작물 : 일반, 풍경, 인물, 광고 등
- 영상저작물 : 극영화,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교육용 동영상 등
- 도형저작물 : 지도,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응용S/W(사무관리, 과학기술, 교육, 오락, 기업관리, 콘텐츠개발용, 산업용, 프로그램 개발용S/W 등), 시스템S/W(제어프로그램, 언어처리, 유틸리티, 데이터통신, 데이터베이스, 보안S/W, 미들웨어 등)
- 편집저작물 :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나.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구성됩니다.

▶ 특허권

-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권

- **정의** :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한 것을 뜻하는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디자인권

- **정의**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상표권

- **정의** : 자기의 상품 등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으로 표시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다. 신지식재산

▶ **저작권, 산업재산권 이외에 경제·사회·문화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한 분야에서 출현한 지식재산을 말합니다.**

- 신지식재산에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데이터, 퍼블리시티권 등이 포함됩니다.



Ⅲ. 지식재산권 관련 부당한 사례 유형²⁾

⇒ 정부용역계약과 관련된 부당한 지식재산권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 **유형 1 : 정당한 사유나 협의 없이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하는 사례**

☞ **관련 페이지 : 15~17쪽**

사례 1

- IT솔루션 개발 기업인 A사는 정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기관은 사업 완료 이후 개발된 솔루션의 저작권을 비용을 부담한 기관측에서 독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전 공고나 계약과정에서 별도의 협의는 없었음
- 향후 또다른 용역 입찰 시 불이익을 우려한 A사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A사가 구축했던 솔루션의 유지보수를 위한 통합유지보수사업이 발주되었으나, A사는 솔루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발주기관은 A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타 업체를 통하여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음

사례 2

- B사는 정부 연구개발용역의 수행사가 되었는데, 별도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용역결과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발주기관이 갖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받았음
- 이에 더하여, 발주기관은 B사에게 용역결과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것을 강권하였음

2) 사례는 조달청 정부입찰 사이트인 '나라장터' 홈페이지 배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사이트 배너 및 전체 회원 메일링 (11,077명), 도시재생사업 관련 용역수행업체 인터뷰 등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과 '대한변리사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인프라엔지니어협동조합', '작은도시기획자모임', '경기테크노파크' 등을 통한 위탁 방식을 통해 수집하였음. (2020년 3월~7월)

사례 3

- C사와 정부기관은 소프트웨어 제작, 납품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기관은 용역결과물이 C사의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저작권 등을 C사가 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발주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나, C사에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았음
- 다만, 이후에 발주기관은 C사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하였음

사례 4

- D협동조합은 지자체와 마을 활성화 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모든 저작권이 지자체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정상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공동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안내받지도 못하였음
- 또한 지자체는 D협동조합이 작성한 용역결과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공지도 하지 않았음

▶ **유형 2 : 선정되지 않은 입찰제안서에 기술된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 등을 발주기관이 임의로 활용하는 사례** ☞ **관련 페이지 : 38~39쪽**

사례 1

- E사는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용역에 선정되어 1차연도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동일 기관에서 후속으로 발주한 2차연도 사업자로는 선정되지 못하고, F사가 선정되었음
- F사는 1차연도 사업 수행자인 E사에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하며 관련 자료를 공유했는데, 이 과정에서 E사는 본인이 2차연도 사업 입찰 시 제출한 핵심 자료 대부분을 F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이는 발주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E사의 자료를 E사 동의없이 F사에 제공했기 때문임

사례 2

- G사는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및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정부용역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업체인데, 콘텐츠 분야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아이디어와 시안 등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분야임
-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 발주기관은 입찰 공고 시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입찰 참여자의 아이디어나 시안을 기관 소유화하고 있으며, G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업 활동 영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함
- 특히 탈락 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업 결과물에 그대로 반영된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는 발주기관에서 선정된 사업자에게 탈락한 기업의 아이디어 및 샘플 등을 참고 자료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음

▶ 유형 3 : 계약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공동 귀속을 인정하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

📖 관련 페이지 : 20~22쪽

사례

- H사는 정부가 발주한 SI 구축 용역의 수행사로 선정되었으며, 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을 발주처와 H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음
- 그러나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이유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개발 과정에서의 소스코드 등 모든 산출물을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이로 인해 H사의 효율적인 용역 수행이 제한되는 한편, 향후 용역 결과물을 배포하거나 개작하는 등 활용함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게 되었음
- 즉, 계약예규에 어긋남이 없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저작물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H사는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 유형 4 : 용역 계약의 결과물(소프트웨어)을 협의 없이 다른 기관에 배포하여 민간의 영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 📖 관련 페이지 : 21~22쪽

사례 1

- I사는 ○○교육청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교육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데, 계약 과정에서 ○○교육청이 이를 다른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
- 이후 ○○교육청은 I사와 별도의 협의 없이 해당 시스템을 관내 각급 학교 등에 무상 배포하여 I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가져왔으나, 법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이 ○○교육청 소유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함

사례 2

- △△연구원은 회계업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J사에 발주하고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J사가 공동 소유하도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연구원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J사의 동의 없이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였고 이로 인해 J사는 당초 기대했던 민간시장의 수요를 잠식하였으나 프로그램 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결끄럽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음



IV. 정부용역계약 관련 지식재산권 규정 해설

➡ 정부용역계약(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은 계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임을 전제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33페이지 참고)

➡ 또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 2019.12.18. 일부개정)

가. 지식재산권의 귀속 원칙 : 공유(공동 귀속)

관련 조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5조의2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5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 공동 귀속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분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특수한 경우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 일방에만 귀속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개발의 기여도,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주의) 공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살펴볼 제56조 제2항은 공유자에게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IV. 정부용역계약 관련 지식재산권 규정 해설

관련 Q&A 1

Q (질문) 저작권이 발주기관에게 귀속(단독 혹은 공동으로)된다는 것은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모두 귀속된다는 의미인가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격권은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실제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되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격권은 창작자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에 귀속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 Q&A 2

Q (질문)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제작, 납품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도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용역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 공동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공동 귀속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만 한정되고, 저작권격권은 창작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갖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발주기관이 용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기관의 범위를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제56조 제4항 참고)

관련 Q&A 3

Q (질문) 정부용역계약에서 저작권을 공유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답변) 무형의 재산인 저작권의 공유는 일반적인 재산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한 물적 재산의 경우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위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 역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저작권법 제48조)

→ 다만, 저작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면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았다면, 공유자 일방은 자유롭게 사용·수익(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은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수익을 넘어 공유자 일방이 자신의 권리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관련 Q&A 4

Q (질문) 발주기관이 용역 목적이나 결과물 활용 용도, 범위, 배포 및 권리 귀속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도 명기하지 않아 용역수행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A (답변) 정부기관 역시 사법(私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만큼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 목적물, 계약 기간, 계약 금액뿐만 아니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도 계약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불명확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 해설을 참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나. 공유 원칙에 대한 예외 : 특허권 등

관련 조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 제35조의3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권리의 귀속 주체 등을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35조의2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 공동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사실상 저작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1

Q (질문)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특허권 등도 공유가 원칙인가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정부용역계약 시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원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귀속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3) 따라서 특허권은 당연히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Q&A 2

Q (질문)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과 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관행적으로 발주기관에 단독 귀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A (답변) 현행 규정이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소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저작권은 용역 수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1항)
- ▶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①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②위탁을 수행한 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발주기관은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도 있으며, ③공공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전부를 발주기관에 귀속시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 해설서」 제5조, 한국저작권보호원)
→ 다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경우,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 ▶ 특허권 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귀속 주체, 지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 제1항 상단)
→ 특히 특허권 등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려면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 제1항 하단)
→ 참고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가 특허권 등을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민간의 권리를 보장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 제3항)
- ▶ 즉,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의 경우 공동 소유가 원칙이며,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성격과 계약목적물의 성질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과 동 가이드라인, 사례 등을 면밀히 숙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지식재산권이 공동 귀속되는 경우의 권리행사 방법

관련 조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부용역계약으로 지식재산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사용·수익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정한 계약조건이나 특약이 없다면, 공동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행사한 당사자가 갖습니다.
-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가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도 있는 만큼,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성격, 발주기관의 의사 파악 등을 통해 권리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수익 행위와 달리,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권리를 이전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제56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인 소프트웨어를 계약당사자 외에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Q&A 1

Q (질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 일방은 대상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유하는 공유자 일방이 자기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사항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유롭게 사용, 수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자 일방이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관련 Q&A 2

Q (질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2항의 하단에는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 ‘배포’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동조 제5항은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을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에서 말하는 배포는 용역사업의 ‘산출물인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제5항은 권리의 지분을 처분·배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산출물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권리(지분)’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2항과 제5항의 배포는 그 대상이 다른 만큼 모순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Q&A 3

Q (질문) 용역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정부 기관입니다. 계약목적물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계약상대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관 단체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려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할까요?

A (답변: 그렇습니다) 저작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유로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에 배포하여 함께 활용한다면 이는 위의 관련 Q&A 1에서 설명한 자기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입찰 공고 시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Q&A 4

Q (질문) 용역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안 유지를 이유로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어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산출물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A (답변) 질문자의 경우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개로 권리 행사를 사실상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를 위해 타방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공유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안을 이유로 저작권의 활용이 제한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부당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이러한 예외의 적용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그 내용은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부당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참고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20.12.10. 시행예정)에서도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단독 귀속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

관련 조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단독 귀속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개작권 :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수정된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표현하고 있음

➡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작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V. 정부용역계약 관련 지식재산권 규정 해설

관련 Q&A 1

Q (질문)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모두 귀속된다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이를 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물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에 권리(저작권재산권)가 귀속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창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저작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작권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면 계약 상대방은 자유롭게 개작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2

Q (질문) 용역결과물로부터 발생할 저작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은 발주기관입니다. 이 경우 규정을 준수하면서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답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1항 단서).
→ 만약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용역 공고 단계에서부터 입찰공고문에 저작권을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 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3

Q (질문)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기밀성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켜야 할까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공유가 원칙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방에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있다면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저작권을 단독 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계약상대자에 설명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관련 Q&A 4

Q (질문) 국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인 A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기 납품 프로그램과 유사한 계약을 B공공기관으로부터 주주하였는데 A기관에 납품했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B기관에 납품할 수 있나요?

A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단독 귀속되더라도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납품한 프로그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A기관에 확인한 후 기 납품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개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A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적법하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 단독 귀속되는 경우 권리행사 방법

관련 조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에 단독 귀속되는 경우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목적 내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이는 계약상대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민간의 권리보호와 정부 사업의 목적 달성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항입니다.

관련 Q&A 1

Q (질문) 계약상대자에 저작권이 모두 귀속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크지 않을까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이 계약상대자에게 단독으로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 것이 발주기관의 당초 용역 목적을 저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관련 Q&A 2

Q (질문)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확보해야 계약목적물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받고 용역계약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의 목적은 계약목적물의 안정적인 활용을 보장받는 것이며, 저작권을 갖지 못하여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계약상대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하는 등 사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개발하였던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권리가 단독 귀속되더라도 발주기관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이용과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계약상대자가 갖는 권리를 발주기관이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권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특별 규정

관련 조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 제35조의3 제2항에 따라 특허권 등이 계약상대자에 단독 귀속되거나 공동 귀속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협력한 상황(공동수급체)이라면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35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등이 본인에게 단독 귀속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등록하는 경우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 등록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92호, 2018.1.29. 일부개정)

관련 조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침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앞서 살펴본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배포·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과는 다소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재인용)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자유로운 복제, 배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담당 기관의 의견입니다.³⁾

3. 국유재산법(법률 제1665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5794호)

- ➡ 정부용역계약에서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이 국유재산 혹은 공유재산이 라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권리 소유 관계 등에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담당부서인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의 의견으로, 향후 규정 정비 시 관련 조항 개정 등 검토 예정

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문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취급되며,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 : 국가, 지자체 외의 자에게 전부 귀속 금지 등

관련 조문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항).

➡ 이 때, 저작권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계약상대자 등)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제3항), 정부기관과 계약 상대방이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민간과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제2항)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시 저작권 관련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관련 조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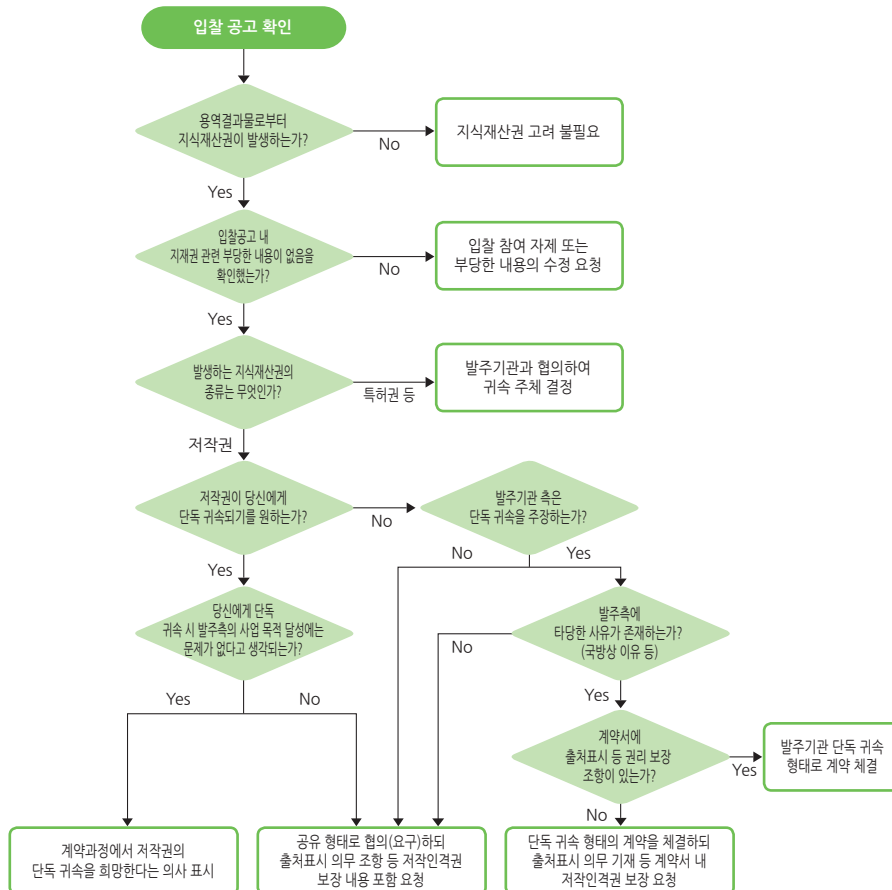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 시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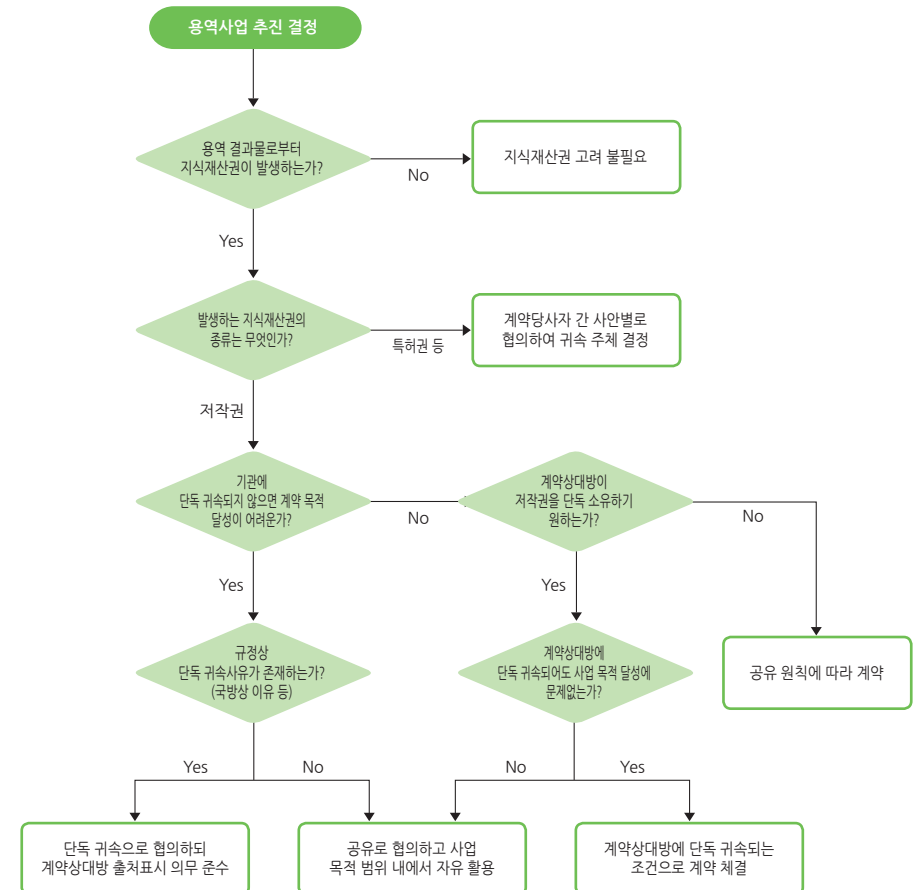
V. 정부용역계약 시 유의사항

1. 단계별 고려사항

가. 계약상대방(민간 사업자) 고려사항



나. 발주기관(공공기관) 고려사항



2. 계약의 일반원칙

◆ 계약의 정의

-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 표시의 합치를 이루는 법적 행위입니다.

◆ 계약의 성립조건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며,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합니다.
- 의사의 합치와 더불어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보유했을 것, 사기나 강박에 의하지 않았을 것 등 일반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반사회질서 행위 유형) 정의 관념, 윤리적 질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등

3. 계약 시 주로 문제되는 권리분야 및 범위

가. 정부용역계약에서의 논의 대상

- ◆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에 대한 권리와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권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창작에 대한 권리 : 저작권,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디자인권 등
- ▶ 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립을 위한 권리 :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

◆ 정부용역계약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분야 : 저작권

- 사인 간 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부용역계약에서는 주로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당사자 간 충돌이 관찰되며, 특히 별도의 신청·등록 없이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관찰됩니다.

나. 법률상 지식재산권 이외의 아이디어 등 지적 무형물

- ◆ 지식재산권 관련 각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아이디어가 상당한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며, 이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찾아보기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특허청, 2019. 4.)

- 개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적, 영업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가이드라인
- 찾아가기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책자/통계-간행물 기타정보

➡ 용역계약일반조건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만 다루고 있으며, 법률상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아이디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이 아닌 일반 계약 법규에 따라 규율됩니다.

관련 Q&A 1

Q (질문) 입찰과정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B업체가 제출한 아이디어를 발주기관이 임의로 용역 수행사로 선정된 A업체에게 배포하는 바람에 두 업체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답변) B업체는 정부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했으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지는 못하였고, 제출한 아이디어는 도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출한 아이디어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표현”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저작권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에 앞서 동 가이드라인의 표준문안처럼 제출된 서류와 자료의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Q&A 2

Q (질문) 발주기관이 용역과정이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취득한 아이디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그 아이디어를 기초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무단 배포하거나 가로채도 괜찮은 것인가요?

A (답변) 우선, 아이디어가 용역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인지, 간담회를 통해 얻어진 것인지, 또 한 아이디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 (1) 용역과정에서 발생했고,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저작권 재산권은 공유가 원칙이며, 각 공유자는 이를 배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되는 권리는 저작권에 한정되며 저작권권은 여전히 창작자인 계약상대방이 단독으로 갖는 만큼, 발주기관이 배포하더라도 출처(창작자)를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저작권이 인정되는 아이디어를 간담회를 통해 취득하였고, 무단 배포한 경우에 저작권은 당연히 창작자에게만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사 구제(손해배상청구 등)와 형사 구제(고소), 알선, 조정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국곡 저작권’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기구(www.copy112.or.kr 또는 1588-0190)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3) 만약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라면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동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아이디어의 무단 도용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4. 계약 시 고려하여야 할 저작권법상의 원칙

가. 권리의 창작자 귀속 원칙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에 원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즉, 정부용역계약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 공동 귀속되거나 발주기관에 단독 귀속되는 경우라도 발주기관을 창작자로 볼 수는 없는 만큼, 저작물을 창작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므로,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인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 ➡ 다만,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류와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저작물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수행합니다.

아이디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키-레터스를 이용한 회람어의 분석 방법은 비록 그것이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어문법적인 원리나 법칙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 이론을 이용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저작권의 침해로 되지는 아니할 것인 바, 원고의 저서와 피고의 강의록의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베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6264 판결]

“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는 그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피고 영상물 1, 2는 원고 영상물을 기초로 하여 구상, 기획되었으나, 원고가 독창적인 장면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원고 영상물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자 2006라503 판결]

“이 사건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詩) 등 다른 작품에서도 이 사건 대사와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Q&A 1

Q (질문) 저작물과 아이디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A (답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저작물)에 한정되며, 표현되지 않은 사상 또는 감정 자체를 뜻하는 아이디어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까지 저작권을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표현 수단을 독점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저작물과 아이디어를 구별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저작물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에 대한 형식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작물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심사 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Q&A 2

Q (질문) 정부기관 종사자입니다. A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B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려 하는데 혹시 A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A (답변) 먼저, 활용한 아이디어가 저작물인지, 단순한 아이디어인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담회는 그 목적이 아이디어를 얻는 것인 만큼 참석자가 묵시적으로 발주기관이 활용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가 발주기관에 의해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아이디어 제공 주체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업무 과정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획득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출처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부여되므로 발주기관은 유념해야 합니다.

관련 Q&A 3

Q (질문) 저작권법에 따른 출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은 각주 등을 이용하여 저작자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 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히고 ▲번역물 등의 2차적 저작물은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 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하고 ▲연설문 등은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하고 ▲신문 등 정기 간행물의 기사, 논설 등은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 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의 명칭(자료의 경우, 자료 제목)과 일시, 장소 및 제공자 이름(회사) 등을 명기한다면 적절한 출처 표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업무포털 > 저작권상담 > 유형별 자동상(‘16.11.29.)

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앞서 살펴본 창작자 귀속 원칙의 예외로, 업무상저작물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작자가 아닌 법인·단체 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 (요건1)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을 것
- (요건2)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달리 정한 것이 없을 것

➡ 정부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만큼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이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를 기관의 직원처럼 이용한 경우라면 발주기관도 저작자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는,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업무상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추가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체부 고시)」에서는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만 보유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계약상대방)의 이용허락을 받아 국민의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계약상대방이 판단하기에 저작물을 일반 대중에게 폭넓게 보급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자유이용 대상으로 이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유이용 허락 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 기준 및 예시 >

일반 국민에 폭넓은 보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방의 활용이 바람직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저작물이 민간에 제공될 경우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거나, 민간에서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저작물의 성질과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창작자(용역수행사)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예 : 지자체 관광지도 등) ② 민간 보급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예 : 보급형 글꼴 파일 등) ③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줄 경우 민간의 저작물 이용이 제약되는 경우(예 : 출제 후 공개되는 국가고시 시험문제, 외국의 법제도 등 번역물) ④ 공공기관 홍보를 위해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예 : 홍보 동영상, 광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으로 창작하였으나 창작자의 지속적인 활용이 필요한 저작물 (예 :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심리상담사가 공동으로 창작한 학교폭력에 방에 관한 영상저작물 등) ② 창작자의 추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 또는 상품 개발이 예상되는 저작물 (예 : 발주를 통해 개발한 원천 소스가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다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마. 공동저작물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권격권)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권격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중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할 경우 이용이 어려운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때 공동저작물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는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 **(구별 개념 : 결합저작물)** 하나의 저작물의 각 구성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단독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 공동저작물의 인정 요건

- (요건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여야 함
- (요건2) 창작에 있어서 공동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 (요건3) 공동저작물의 구성부분이 각기 분리되어 이용될 수 없어야 함

관련 Q&A 1

Q (질문) 발주기관 담당자는 해당 용역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의 제작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제 기여를 하는데, 계약목적물을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발주기관도 공동저작자로서 저작권격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답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아이디어 제공, 방향 제시, 창작을 보조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만큼, 발주기관이 공동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목적물의 창작 과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참여하여 실제 작업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 저작물 창작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으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로 감수자 또는 교열자, 창작의 의뢰자, 보조자, 조사자, 아이디어 제공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바. 공유(共有)저작물의 이용

- ➡ 정부용역계약에서의 공유저작물 논의는 사실상 저작권재산권에만 한정됩니다.
 - 저작권격권의 공유가 인정되려면 발주기관이 공동창작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 ➡ 공유 상태의 저작권재산을 행사하려면 권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 없이 특정 권리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등의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다른 권리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 공유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은 권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며,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가. 정부용역계약 공고 시 검토사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전 검토사항 (공고단계)

1. 발주부서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 여부		비고
		검토	해당없음	
1	계약목적물로부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수받지 않고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예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방침이 계약상대자에 부당한 피해를 끼칠 것이 예상되지는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사업설명 또는 공고문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적절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계약부서 검토사항

용역명			
발주부서		발주담당자	

구분	검토사항	검토 여부		비고
		검토	해당없음	
1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예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사업설명 또는 공고문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적절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발주 기관에 귀속(단독, 공동)되는 경우 이를 적절히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국유 재산 혹은 공유재산에 속하는가? 속한다면 각각의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계약체결 시 검토사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전 검토사항 (계약단계)

구분	계약 시 검토항목	검토 여부		조치사항	비고
		검토	해당없음		
공통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등이 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공유 또는 발주기관(단독)귀속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계약상대자(단독)귀속	
	(그렇다 선택 시) 사유가 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과 같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따른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공동소유(요건불충족)	
공동 귀속	계약상대자가 공유상태에 있는 저작권(저작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사용, 수익행위를 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계약상대자와 제약을 위한 협의 필요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사용·수익 제한 없음	
	(그렇다 선택 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협의하여 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당사자 일방의 사용·수익 제한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사용·수익 제한 없음	
	상업적 활용 제한을 위한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문제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당사자 일방의 사용·수익 제한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사용·수익 제한 없음	

구분	계약 시 검토항목	검토 여부		조치사항	비고
		검토	해당없음		
공동 귀속	공유상태에 있는 저작권(저작권) 등을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얻는 이익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합의에 따름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권리 행사한 자에 이익 귀속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제3자와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발주 공고 및 계약서에 반영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별도 반영 불요	
발주 기관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계약상대자의 개작 가능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사유 확인	
	(아니다 선택 시) 그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개작 제한 가능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개작 제한 불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상업적 활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특별한 사유 확인	
	계약상대자가 개작권을 발주자의 허락 하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양도 가능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특별한 사유 확인	
계약 상대자 귀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정당한 계약목적물 사용(기능 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사용보장 필요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적절함	

6. 입찰 공고 및 계약서 표준 문안

- 발주기관이 용역사업 추진 시 지식재산권 귀속 유형별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기를 권장하는 문안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중인 공고나 계약의 내용이 불합리하지 않은지 검토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표준문안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공동 귀속 유형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합니다.
-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발주기관 단독 귀속 유형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합니다.
-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 단독 귀속 유형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합니다.
-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본 용역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 단독 귀속 유형

· 제0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 ① 계약목적물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에 단독으로 귀속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단독으로 귀속된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에서 계약목적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발주기관에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④ 발주기관이 제1항에 의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 내 지식재산권 조항 표준문안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공동 귀속 유형

· 제0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 ① 계약목적물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 공동으로 귀속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지분, 공유자 일방의 사용 수익 범위, 이익의 귀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발주기관 단독 귀속 유형

· 제0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 ① 계약목적물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단독으로 귀속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단독으로 귀속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창작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 저작권 등록제도

▶ 저작권 등록제도 개요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권리관계의 명확화와 이에 수반되는 효력 발생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즉,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 시 발생하는 주요 효력

- ▶ 추정력 : 저작자로 등록된 사람은 법률상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므로, 저작권 침해 분쟁 시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저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역으로 입증해야 하며 창작 연월일 등이 등록된 경우 해당 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
-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변동등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

- ▶ 손해배상청구 : 침해를 당하기 이전에 저작권을 등록했다면 실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

▶ 저작권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

- ▶ 저작물이 아닌 경우 : ① 동물의 작품이나 인공지능의 결과물 ② 단순한 사실(Fact) 등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지 않은 것 ③ 아이디어 ④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
-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 ① ~ ③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거나 필요서류 등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경우 등

▶ 저작권 등록 사항

- ▶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

▶ 저작권 등록 제출 서류

- ▶ 저작권등록신청서 및 저작권등록신청 명세서
- ▶ 복제물, 수수료 및 등록세
- ▶ 신분확인서류(주민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등)

- ▶ 등록 원인에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저작자 목록, 저작물 목록(저작자, 저작물이 복수인 경우) 등

◆ 저작권 등록 절차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일 원칙(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 ▶ 심사방식 : 구비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신청물이 최소한의 저작물인지에 대한 형식 심사*

* 저작권 등록이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니므로 창작성의 정도 및 저작권 귀속관계 등에 대한 실질 심사는 하지 않음

-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경남 진주 본원) 또는 온라인 신청(www.cros.or.kr)
- ▶ 수수료 : 23,600원 ~ 63,600원(저작권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따라 다름)

※ 출처 : 장진숙, 「꼭꼭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4~25면.

◆ 저작물 종류별 저작물성 심사 사례 (예시)

구분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사례	저작물성이 긍정되는 사례
어문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예 : 왕의 남자 사건) 아이디어의 서술에 불과한 간단한 기획안, 요리 레시피, 게임 규칙과 방식에 대한 글,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시, 소설, 극본 등 문학작품 SNS의 글이나 편지 강의안이나 학술서적
건축	실용적 기능에 충실한 일반적인 건축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아파트 관련 사건에서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주장된 부분은 아파트의 내부공간, 외부디자인, 단지배치도 등인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창작성을 부인	경주엑스포 상징건축물 '경주타워' 사건 펜션 : 삼각형 펜션 사건, 벚꽃 궁전 사건 카페 : 테라로사 사건 공연장 : UV하우스 사건 골프코스

구분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사례	저작물성이 긍정되는 사례
도형	‘전국도로관광지도’ 사건 :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에 불과 여행천하유렵(트래블월드) 사건 :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음 오니온맵 사건 : 구조물의 본래의 형상에 가깝게 입체적인 형태로 표시하되 지도의 목적에 맞도록 단순화한 것일 뿐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하급심) 의도적인 왜곡 표현으로 ...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특징이 있으므로 저작물성 인정
컴퓨터 프로그램	워드파일, 그림파일, 소리파일, 동영상 파일 등 데이터파일, 엑셀파일, 설정 파일(*.ini), 공중전화카드, 워터마크	대부분의 게임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창작성 있는 마이크로코드, 선언코드 리스 파일(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글꼴(폰트) 파일(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편집 저작물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체제를 갖춘 저작물이 있는 경우 단순한 기계적 작업, 12권으로 분책한 것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 그 자체인 것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의 웹사이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예:다수의 경마지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공통된 양식 누가 편집해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 : 법조수첩) 선발업체의 화면 구성이 사실상 표준으로 작용하는 경우(예:PDA용 증권 프로그램 화면)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체제를 갖춘 저작물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인물, 사건 등의 주제별로 사진을 분류, 배열한 점에서 독창성이 있거나 축적된 여행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 편집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들만을 취사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기술한 경우
2차적 저작물	기술적 처리를 통해 화보집을 모바일용으로 만드는 것, 기존 그림을 실루엣 처리한 것, 디지털 샘플링, CD 마스터링, 골프코스의 벙커, 워터해지드 위치·크기 일부 변경 등 단순한 축소, 사소한 개변	외국영화에 자막을 삽입한 것(2010도9498) 교과서를 이용하여 강의(2011카합683)를 하거나 문제집을 만드는 것(2013가합5771) 만화(2004노555)나 서적의 요약 광화문 모형 사건(2016다227625) 등 실질적 개변

※ 출처 및 상세내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 최진원,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11~362면.

❖ 사업계획서, 기획안이 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을까?

- ▶ 사업계획서, 기획안 등의 경우에도 기재된 문장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어문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업계획서·기획안의 아이디어가 독창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를 표현한 단어의 조합(combination of words) 부분에 창작성이 있어야 등록 가능하다.
- ▶ 기획서에 표현된 문구나 문장들에서 저작자 나름대로의 개성이 나타나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슈퍼 바이블 엑스포 행사」 기획서 사건에서 ‘위 기획서는 그 표현에 저작권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개성이 나타나 있어 저작물로서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슈퍼 바이블 엑스포 행사 기획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1.4.7. 선고 2010가합4394 판결)
엑스포라는 행사를 위해서는 통상 기획서 작성이 필수적이고 그 기획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행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위 기획서는 저작권자가 상당기간 동안 성격의 내용에 바탕을 둔 구조물과 체험관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으로 작성된 점, 위 기획서에는 슈퍼 바이블 엑스포라는 성격을 테마로 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기획배경, 행사목표, 행사개요, 기대효과, 설치물 개요, 운영계획, 홍보 마케팅 계획, 재무계획 등의 계획이 나름대로 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획서는 그 표현에 저작권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개성이 나타나 있어 저작물로서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인정된다.

- ▶ 다만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평범하고 흔한 문장으로 기술한 것이라면 저작물성이 없다. 저작권 등록은 아이디어의 독창성과는 관련이 없다. 해당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

어 있거나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전의 다른 사람의 사업계획서에서 흔히 보던 표현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등록이 되기 어렵다.

▶ 등록 신청인을 위한 실무상 TIP 1.

사업계획서, 기획안 등의 경우 ‘아이디어’를 보호받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계획서·기획안이 어문저작물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을 베껴 쓰면 안되는 것이지 아이디어까지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사업계획서가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어문저작물로 등록되더라도, 권리보호 범위는 어디까지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즉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 기획안에 내재된 아이디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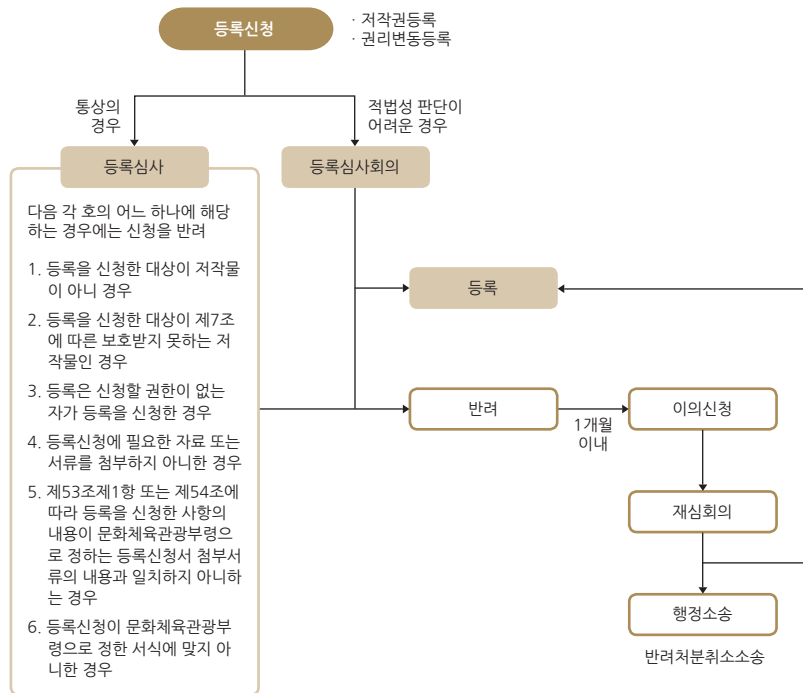
※ 아이디어의 보호는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참조

▶ 등록 신청인을 위한 실무상 TIP 2.

어문저작물 등록 가능성과는 별론으로, 사업제안서·기획안 등은 **편집 저작물**로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다. 편집저작물은 어문저작물과 달리 편집물 중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록 가능하고, 저작권 보호 범위 역시 이에 국한된다. [제3절 편집저작물 참조] 즉 편집저작물 등록 시에는 언어로 표현된 부분이나 선택, 배열, 구성의 대상이 된 그림이나 사진 등의 창작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언어로 기술한 표현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어문저작물, 편집물 중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디어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 범위는 각각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 저작권 등록 절차도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최진원,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9면

더 찾아보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 www.copyright.or.kr
- 저작권 등록편람 : 홈페이지 > 자료 > 발간자료 > 조사·연구 게시판(“20.8.10.)
- 곡곡 저작권 : 홈페이지 > 교육포털 > 청소년저작권교실 > 나눔터 > 자료실(“16.6.1.)
- **저작권 등록 문의** : www.cros.or.kr / 1800-5455
- **저작권 침해 상담** : www.copy112.or.kr / 1588-0190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II 608호
<http://www.ipkorea.go.kr>, 044-202-4242

디자인·인쇄 리드릭 02-2269-1919

